



6면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음 3월 18일) 제27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 오른쪽)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8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경북도, 전주~김천 철도사업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촉구

송하진 지사-이철우 지사, 공동 성명 발표

“국토균형발전·동서 화합 위해 결단 내려야

국가계획 최종 반영토록 모든 역량 쏟을 것”

달빛내륙철도 계획안 반영도 함께 건의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 지사가 28일 만나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이날 함께 성명을 발표하며 “전주와 김천을 잇는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번 사업을 기다려 온 전북도와 경북도 도민 모두가 큰 아쉬움과 실의에 빠져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국토 개발 사업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하며 “수도권과 남북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국가발전의 균형추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일로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로 국가철도 철도계획을 수립하는 것

은 국가 계획의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와 김천 간 철도가 신설되면 동서지역은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재는 전주에서 김천을 오가는 양 지역의 도민들이 철도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양 지사는 “이는 가히 혁신적인 변화라 할 만하다. 동서 방항으로 물류와 사람이 빠르고 편하게 오가게 되면 국민의 소망인 상생과 통합의 미래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은 어떠한 경제 논리와 수치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면서 “전주~김천 철도사업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접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실현될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국

가계획 최종 반영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전북도와 경북도는 동서화합과 상생의 오작교인 전주~김천 철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전주~김천간 철도는 전북도 전주와 경상북도 김천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건설사업으로, 노선길이 101.1km, 총사업비 2조3,894억원이 소요된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같은 장소인 경남 거창군청 앞에서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초안에 전북과 경북을 잇는 전주~김천 철도사업과 광주,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신규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바 있다. /유호상 기자

“직무연관성 있는 부동산 투기 미발견”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공무원·가족 대상 조사 결과

전주시가 간부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45일간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추진·협약부서의 과장, 팀장, 실무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포함됐다. 일반인 가족들은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원 제출토록 했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 정보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이용해 조사하는 대인분위 방식과 필지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물분위 방식을 병행해 조사했다.

대인분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자료 등을 토대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만 4,00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했다. 대물분위 조사에서는 토지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조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조사 대상 1905명이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번이 있는 등 지역에서 매매를 한

총 640건의 자료를 확보해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 시각화했다.

이런 여러 교차조사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2건과 인근 지역 22건 등 총 43건의 심층 조사 대상을 추출한 조사단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취득세 내역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 기간 내 취득 여부와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단은 그 결과 사업지구 내 2건 중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가려냈으나, 이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한 사례이고, 나머지 1건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에 재직하지 않는 등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나머지 19건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조사대상 시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지구 인근지역 22건은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역시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미영 단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 그 가족까지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그린뉴딜 중심지 조성 ‘시동’

새만금청, 포럼 개최... 에너지기반시설 제도 도입 등 강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매일 경제신문과 공동으로 28일 새만금컨벤션센터(GSC)에서 ‘그린뉴딜과 새만금 개발’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오종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 등을 비롯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기관장, 전북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오종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은 “새만금이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가 산업단지 인근

에 있는 그린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여기에 RE100 구현을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과 그린수소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효과 노릇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크게 2가지 세션(분과)으로 나뉘, 세션1 ‘그린뉴딜과 신산업’에서는 김충남 에너지기술연구원장과 이종희 전북대 교수가, 세션2 ‘탄소중립과 도시’에서는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과 류승한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김충남 원장은 새만금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인프라 구축(기반시설)과 선도모델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승한 본부장은 새만금의 제도적 과제로 신에너지 설비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기반 구축, 에너지 거래와 신기술 적용 등에 대한 규제개혁 특구 제도 활성화,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등을 강조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포럼은 새만금의 미래를 한결 가깝게,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이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새만금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